

민선5기 광주시·전남도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전망

수출 호조 목표달성 '무난'

광주, 11만 5천개 중 6만 7천여개 만들어

전남, 30만개 목표...3년간 18만 5천개 창출

광주시가 '소비형 도시'에서 '수출형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민선 5기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11만 5000개 창출'계획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전남도는 민선 5기 '일자리 30만개 만들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18만50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에도 6만 6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목표는 11만5760개로, 2012년 현재 6만6982개를 만들어 57.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올해 최대 3만5000개와 2014년 상반기에 최소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광주지역 취업자수 증가율은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해 전국 평균보다 3.4배나 높은 4.61%로,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2만88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애초 목표인 2만

3187개를 24.5%나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10~12월 기준으로 광주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2.1%로 전국 평균(1.4%)을 훌쩍 뛰어넘었다. 일자리의 질적인 면에서도 상용 일자리가 9859개로 전체 일자리 중 34.2%를 차지했다. 광주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년 대비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덕분에 광주시는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 평가가 최우수상,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

신규 일자리 성과의 배경에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전략산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 양성, 지역 고교와 대학들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력 공급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취업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광주시 박동희 일자리창출 과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짐에도 광주는 3년 연속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기아자동차의 62만대 생산라인 구축과 광산업, 정보가전 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지역경제가 탄탄해지고 있는 만큼 전년 실적을 뛰어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민선 5기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0년 5만1143개, 2011년 6만 5311개, 지난해 6만8896개로 해마다 새로운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 기간 일용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적인 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전남도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151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모집,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기능훈련,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YS·DJ·盧 균형 노력...MB 노골적 호남홀대

박근혜 정부 호남장관 '0'...과거 정부에선?

빅3·경제부처 호남 얼마나 발탁할지 관심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선에서 수도권과 영남 인사가 증용되고 호남 인사는 전혀 없자 과거 정부의 호남 인사 대응 사례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두 차례의 인선에서 장관급 이상 가운데 호남 출신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김 실장 내정자는 내각의 장관은 아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첫 내각에서 영남 출신 장관은 8명, 호남 출신은 6명, 충청 출신은 4명으로 비교적 지역을 안배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이른바 빅3(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인사에서도 황인성(호남) 총리, 박관용(영남) 실장, 김택(영남) 안기부장으로 영남을 우대하고 호남을 홀대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분석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첫 조각시 장관의 출신 지역이 영남 5명, 호남 5명, 충청 4명으로 나뉘었다. 이전 정부보다 영남 비중이 줄었다. 특히 빅3 인사에서는 김종필(충청) 국무총리, 김중권(영남) 비서실장, 이종찬(서울) 안기부장 등으로 호남 출신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고건(호남), 비서실장에 문희상(경기),

국정원장에 고영구(강원)를 각각 임명하며 영남 출신임에도 빅3에 영남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각에서는 부산·경남(PK) 출신 4명과 대구·경북(TK) 출신 3명으로 영남 출신을 7명 임명했으며 호남 인사는 4명, 충청 출신은 2명, 서울·경기 출신은 3명을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영남 출신의 우위 현상이 뚜렷했다. 우선 빅3 인사에서 한승수(강원)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류우익(영남) 비서실장, 김성호(영남) 국정원장 등 나머지 두 자리를 영남 출신으로 채웠다. 또 영남 출신 장관은 TK 3명, PK 2명 등 모두 5명이었지만 호남과 충청, 서울 출신이 각각 2명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사정의 핵심사임도 영남 출신에게 졌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곤 호남을 홀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빅

3 인선 또는 경제부처의 수장에 호남 인사를 얼마나 발탁하는지 나아가 전체 내각 내에 호남인사가 얼마나 배치되는지가 박 당선인이 주창해온 '대타령'인사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호남 출신 인사는 14일 "내각 진출보다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청와대 진출"이라며 "청와대 비서진에 호남 출신인사가 얼마나 입성하느냐도 향후 5년간 호남이 소외의 굴레를 벗을 수 있느냐를 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시 중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과학부와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눈빛고 찾아봐도...

병역면제·위장전입·재산 불법증여...의혹 또 의혹

김병관 국방 장남 8세 때 임야 매입 ... 증여세 논란

황교안 법무 병역면제 의혹·정홍원 총리 위장전입

지난 13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재산과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검증대 위에 올랐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남 명의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를 매입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용문면 일대에 21만㎡ 가량의 임야를 부인 명의로 신고했

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이 임야가 부인과 장남이 절반씩 소유한 것으로 돼 있어 김 내정자가 고의로 장남 명의의 부분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땅의 매매일은 1986년 11월 19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내정자가 1986년 11월 19일 8살 때 임야를 매입한 셈이 된다. 또 장남이 누군가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 이 땅을 취득했다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

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김 내정자는 "예천 땅은 장인이 사 준 것"이라며 재산 공개 때 장남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빠졌다면 실수"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병역 면제 과정이 검증 대상이다. 황 내정자는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히 의혹이

라고 보건 어렵지 않나 싶다"며 "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상황을 파악한 뒤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8년 9월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지만 자신은 같은 해 9월 6일 구로구 독산동 한생연립의 누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정 후보자 측은 14일 "만약 주소지를 옮기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

남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됐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와 6명의 내정자 등 7명의 재산규모는 1인당 평균 1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 부·국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7명의 재산 총액은 재산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86억7200만원이다.

정 총리 후보자가 19억1200만원(2011년 공개)으로 가장 많고, 김병관 내정자가 18억4400만원(2008년 공개)으로 이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황교안 내정자도 13억700만원(2011년 공개)으로 10억원을 넘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계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and the text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and 'www.segistar.co.kr'.

Footer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ISO, etc.)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